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 2008년 4월 30일(수)

28th

■ 발행인 : 지재식 ■ 편집인 : 최광수 ■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 031-727-4815 ■ 홈페이지 :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필수유지업무법, 갈등과 대립만 부추켜

4.28 필수유지업무 노사자율 결정을 위한 집단교섭보장 촉구 기자회견



필수유지업무가 "또 다른 '직권중재'"로 도마에 오르기도 있다.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당초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권중재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필수유지업무 노사자율결정을 위한 집단교섭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개정노조법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우려는 한

치의 어긋남 없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전적 제한조치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고, 대체근로 허용과 긴급조정제도 존치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별교섭, 집단교섭을 통한 필수유지업무 논의보장 △시행령과 독립 노사자율 필수유지업무 구체적 결정 보장 △집단교섭 보장과 연동 중노위역할 제고와 실질적 조정기능 수행 △서울지하철, 발전, 철도 등 충분한 노사교섭 없이 지노위에 결정 신청한 사건 결정보류 등을 정부와 사용자 측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나 한결같이 80%를 상회하는 운영유지율이 명문화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사업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선이해가 없는 노동위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설정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철도, 발전 사용자는 일체의 교섭 시도 없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설정을 위한 집단교섭" 요구는 필수유지업무의 가장 기본적 토대인 '업무대체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이 단순히 사업장단위에서 노사간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입법안 쟁취투쟁과 국제노동기준에 명백히 배치되는 현 제도의 반노동적 성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연맹은 주요 필수공익사업장인 산하 KT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5년간 틀을 잡은 산별교섭이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파탄에 이르게 생겼다"며 "필수유지업무 타결 없이 산별교섭 없다"는 사측 태도는 악법을 최대한 이용해 산별교섭을 무력화 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임성규 위원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3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며 "'공익' 차원에서 '이 정도면 유지하겠다'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면 KT출신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이용경 · 구본철 당선자

제6회 동아시아 통신 노동조합 포럼 참가

통신방송 융합의 규제 · 통신분야 노동자 조직화에 대해 토론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6회 동아시아통신노동조합 포럼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2면) 이번 포럼은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규제 정책 △통신분야에 있어서의 조직화 및 조직확대라는 2가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통신방송의 융합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각국의 통신산업이 방송과 통신의 이중규제로 인해 사업에 대한 제약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경우 IPTV 법이 마련돼 통신방송 융합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통신산업의 신사업 기회 확대와 통신노동자의 고용확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도록 법체계나 행정기관의 태도를 개혁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

시킴에도 불구하고 망투자 비용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부담되어 있다면서 비용 부담의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신노동자의 조직화에 관한 별도 결의문을 채택해 통신노동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통신노동조합 포럼은 2003년 이후 한국의 KT노동조합, 일본의 NTT노동조합, 대만의 중화통신노동조합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UNI본부, UNI아시아태평양, UNI유럽, UNI아프리카, 일본정보통신연맹, 일본 KDDI노동조합 등이 참관단체로 참석했다.



채신공제조합 최후 배당금 송금불능자 내역 통보

채신공제조합 파산채권 관련 최후 배당금을 송금하였으나,

등록된 개인별 은행계좌가 입금이 불가하여 송금처리 되지 않은 조합원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명단을 첨부하오니, 전국 각 지부에서는 확인하여 공제조합 파산채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의 동료 및 선·후배께서는 연락이 가능한 퇴직 조합원께도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송금불능대상 : 3,940명 (대상자 명단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 문서/정책 참조)

□ 송금불능사유 : 입금계좌 '휴면 및 계좌해지' 상태

□ 채신공제조합 홈페이지 : http://chegong.or.kr

□ 추가 지급계획 - 해당 소속국에 협조 요청 안내문 발송

- 최종 미확인 조합원(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 은행계좌 해지 등에 따른 송금불능 조합원(채권자)에 대해서는 계좌변경신청 접수가 되는대로 재송금을 하고 있음.

따라서, 배당금 미수령 조합원(채권자)은 은행계좌를 확인하시어 채신공제조합으로 연락(☎02-775-621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118주년 노동절

그 유래는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독점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869년 필라델피아에서 전국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기사가단이 결성되고, 1886년 미국 노동총연맹이 탄생하여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다음날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 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위중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집회를 주도한 노조 지도자 8명을 범인으로 기소한 당국은 이듬해 처형 4명, 종신형 2명, 옥중 자살 1명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빌린 살인이었다.

피고인들의 성향이 무정부주의자라는 것뿐 어떤 유죄 증거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후 진술에서 그들 중의 하나는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 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고 외쳤다. 그는 또 "우리의 침묵이 오늘 우리의 목을 매다는 당신들의 사형 명령보다 훨씬 강력해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교수대에 올랐다. 오죽했으면 런던에서 버나드 쇼가 "세상이 8명의 인민을 잃으니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법관 8명을 잃는 편이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을까.

뒷날 재조사로 주지사는 그들의 혐의를 벗겨주었으나 6년 전에 가져간 목을 돌려줄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을 "헤이마켓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7년 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을 경악케 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네셔널 설립대회에서는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상황을 보고 받고,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여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했다. 이렇게 메이데이는 시작되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민주노총, 118주년 노동절 맞아 전면투쟁 선언

민주노총의 대정부 5대요구는 ▲비정규직법 전면제개정 및 영장의 일자리 확보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확보 ▲기초연금 15% 쟁취와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 ▲산별교섭의 제도화 및 노동기본권 확보 ▲한미FTA비준 저지와 초국적 투기자본 규제 등이다.

동아시아 포럼 주요 내용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이어져

제6회 동아시아포럼의 주요 내용은 통신방송 융합과 이에 따르는 네트워크 중립성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각국의 주요 공동된 내용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 위험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트래픽 유발 사업자들의 비용분담 또는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일정 정도의 차별적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NTT노동조합

컨텐츠 제공사업자 할증요금 부과해야

① 네트워크 증강 비용의 부담을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증강 코스트의 증분의 부담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총무성의 시산에 따르면 2007년 11월 시점에 일본의 브로드밴드 계

약자의 트래픽 총량은 평균 약 800Gbyte 로서 2004년 11월부터 3년 간 약 2.5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한 리치콘텐츠(동화상) 배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 밖에도 P2P 이용의 증대 등의 요인도 있음). 이들 네

트워크 사업자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캐리어 회선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접속하여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증분의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특정국의 콘텐츠·어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접속이 집중되어 타국 네트워크 사업자의 설비에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인터넷·백본 사업자(그 대부분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상호 접속에 있어서의 수입분배 방법(즉 트랜짓 피어링(transit peering) 등의 현행 접속제도)의 공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② 대역확보 보증을 요구하는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통신사업자는 대역확보의 보증을 요구하는 사업

자에게는 할증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이용량에 따라 네트워크 증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신사업자가 대량의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 대역확보의 보증을 요구하는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것은 네트워크 이용자간의 공평성 확보로도 이어진다.

③ 할증요금의 설정과 인터넷의 자유에 대해서

인터넷의 자유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요금으로 인터넷에 접근 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신사업자는 맹렬한 기세로 증가하고 있는 트래픽을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네트워

크를 증강하지 않으면 인터넷의 자유를 확보할 수 없다.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말단 사용자 요금을 인상하거나 대량의 콘텐츠 배포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할증요금을 설정한다고 해서 인터넷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 인터넷은 「네트워크 사업자」, 「콘텐츠·어플리케이션 사업자」, 「단말·설비 벤더」, 「말단 사용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운영공동체적 시스템이다. 인터넷 세계의 공존공영적이고 영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가 개별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 시스템을 협조적으로 유지하는 여론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대만중화통신노동조합

네트워크 질 확보 위해 사용자 비용부담 필요

「네트워크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네트워크 콘텐츠 제공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과 경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트워크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립네트워크의 상업적 가치에 대해서 무조건 이의를 주장할 수는 없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콘텐츠 제공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계적으로 평등한 경쟁 메커니즘이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서비스의 질 확보나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과 투자가 촉진 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비용부담」에 의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질 확보

인터넷네트워크의 보급, 브로드밴드의 증가에 따라 유저의 대역폭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전진화사에서는 이들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고액의 투자로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고품질로 보다 넓은 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전진화사는 단계적인 인터넷네트워크 요금정수제도를 명확히 내세우고 비교적 고액의 요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품질이 안정된 큰 대역의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고, 많은 액수의 비용 지불을 원하지 않는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는 대역의 보증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NGN이 등급이나 구분을 분류한 서비스와 요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 전진화사도 이

문제에 대해 상업적인 해결안을 찾아 낼 수 있으며 경영조건과 관리의 경영환경을 확보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해야만 한다.

수익과 투자의 균형 확보

기술이 발전·성숙하고 영상음성 다운로드가 응용 보급됨으로 인해 전송 필요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전진사업자는 NGN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고정망과 이동망의 통합(Fixed Mobile Convergence ; FMC)이라고 하는 우위성이 가져다 준 비즈니스 기회에 편승하여 더욱 많은 휴대 서비스나 경영 모델, 수익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전진 사업자가 이분야에서 전진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최종적 영업수익이 만약 목표액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NGN의 발전도 자연히 늦어지게 된다. 전면적인

광파이버와 IP 화의 진척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시장의 반응과 유저가 받아들여 줄지에 달려 있다. NGN에 대한 투자의 축진은 시장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영업수익과 투자의 균형을 어떻게 도모해 갈지가 전진사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대만에서는 P2P의 전송량이 대역폭의 60%를 초과하고 있다. 중화통신이 차별화된 요금정수방식의 채용을 검토한다면 시스템의 유지나 갱신에 들어가는 비용을 유효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당연히 장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지만, 우리는 가까이 중화통신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의 정비를 서포트하고 중화통신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 KT노동조합

투자 촉진을 위한 망접근 조건 필요

네트워크 중립성의 문제는 IPTV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네트워크사업자와 네트워크 이용자(콘텐츠제공자, 인터넷서비스업자 등) 간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는 인터넷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IPTV 법 도입을 논의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철학과 실제 규제틀을 마련하는데 많

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개방 논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가 네트워크 중립성에 근거한 개방논리이며 둘째가 접근권 보장에 따른 중립성 논쟁이며 셋째로 지배력전이 방지측면의 중립성 논쟁이다.

첫째, 네트워크 중립성에 근거한 개방논리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 트래픽의 비차별적인 대우를 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양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변경하거나 대역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증설을 위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수익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투자에 대한 기대치 즉 수익의 확실성이 없이는 네트워크 고도화에 나서기도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 중립의 원칙이 IPTV 망개방의 근거로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IPTV 서비스가 공중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IPTV 서비스는 대부분 폐쇄형서비스로 설계되고 있다.

둘째, 접근권 보장의 측면에서 본 중립성 논쟁은

타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요지이다. 이는 후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자칫 후발사업자는 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기대어 이익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 결국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투자의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향후 네트워크의 하향평준화를 시킬 수 있다.

셋째, 지배력 전이 방지 측면으로서 네트워크 개방 논리는 넓게 볼 때 네트워크 접근성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기도 하다. 즉 필수설비를 지배한 사업자가 그 설비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망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KT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망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

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즉 IPTV가 과연 독립적인 시장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케이블 TV, 위성 TV 등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IPTV를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하나로서 본다면 지배력 전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지역케이블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미 보유 사업자가 네트워크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하려 한다면 몇가지 전제가 요구된다. 그 전제는 △후발사업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건이 필요하며 △전송품질 및 전송 우선순위 등급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후발사업자가 신규진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설비만을 한정해서 접근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도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노동조합은 전국여성간부 중심의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5월 13일부터 10일간 진행한다. 노동조합은 2008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조합간부들의 집합력강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교육 시기 : 5월13일(화) ~ 23일(금)

○교육 장소 : 대전연수원

○교육 대상 : 지부여성부장, 여성대의원, 지방여성국장, 신입조합간부

○교육 인원 : 3720명 (예정)

○주요 교육내용

- 2008년도 대외정책
- 조합간부의 역할과 자세
- 선전 선동 (이론과 실습)
- 복지후생(현안문제)
- 여성의 지위와 역할
- IT산업변화에 따른 KT의 변화와 대응

○교육 일정

- 5월 13일 ~ 14일 : 강북지방본부 · 제주지방본부 여성간부
- 5월 14일 ~ 15일 : 대구지방본부 · 전북지방본부 여성간부
- 5월 15일 ~ 16일 : 전남지방본부 · 본사지방본부 여성간부
- 5월 19일 ~ 20일 : 충남지방본부 · 경남지방본부 여성간부
- 5월 20일 ~ 21일 : 부산지방본부 · 충북지방본부 여성간부
- 5월 21일 ~ 22일 : 서부지방본부 · 강원지방본부 여성간부
- 5월 22일 ~ 23일 : 신입간부

KT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지난 4월 총선결과 KT출신 국회의원당선자가 2명이 배출됐다. 당선자인 이용경 전 시장과 구본철 전 경기남부NSC지사는 향후 정보통신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두 당선자를 만나 향후 국회 활동에 대한 포부와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인터뷰 진행 : 최광수 정책기획실장>



“통신산업의 가치사슬변화 재교육 등을 통한 고용변화에 노사가 적극 대응해야”

<약력> -AT&T베 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통신 선로연구소 소장 -한국통신연구개발본부 본부장 -KTF대표이사 사장 -KT대표이사 사장

먼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통신을 리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이에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믿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유도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믿고 따라 갈수 있게 국민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는 통신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셨으며 그만큼 경험도 많고 기대감도 큼니다. 통신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통신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KT에서 제가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KT는 지배적 사업자로써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활발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풀어서 경쟁을 저해하는 방향이 아닌 자극을 통한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주파수, 번호 등)에 대한 관리는 잘하되 사업의 허가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양강정책', '3강정책'이라는 인위적인 정책들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강·3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쟁만 되면 사업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 유효한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 위주의 기업편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통부의 해체로 통신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 연구 등이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었

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막지 않으면 업계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능동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빌미로 삼아 경쟁사를 억제한려고도 합니다. 능동적 기업활동을 못하는 것은 규제기관과 업계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서비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고용 또한 통신산업에 따라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당선자께서는 통신서비스의 발달과 고용변화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신산업은 현재 크게 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치사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수화기를 들면 KT의 다이얼 톤이 나왔지만, 지금은 PC를 켜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고객이 소유하는 가치사슬의 주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KT는 점점 백그라운드 인프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객의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웹사이트의 페이지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합이 이루어지고 업계가 변하면 고용형태도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서비스와 콘텐츠 쪽으로 변화되고 중요시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교육도 받아야 하고 전문성도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최근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망중립성, 콘텐츠 동등접근 등의 문제가 사업자간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시스템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통신분야에서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KTF나 SKT나 자기들의 CP(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통신분야의 발전에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선두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자마자 남 좋은 일을 시킨다면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를 두고

투자자도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정도 유보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이 융합이 되면 망중립성은 방송의 채널 오픈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T가 2002년 완전 민영화 이후 효율성,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노동강도 심화, 외국인 지분문제, 해결되지 않는 독과점 문제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KT민영화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민영화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이해를 회사경영에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의 효율적 운영 등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민영화 되면서 국제적인 금융시장에 노출되어 그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KT가 국가 인프라를 책임지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통신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인든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이 잠시 들어와서 수익만을 빼먹고 나가는 형태는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SKT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 합병하고 KT와 KTF의 합병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는 KT와 KTF의 합병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합병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기를 늦추지 말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영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겠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유선과 무선이 통합되는 환경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KT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KT를 떠난 지 3년 되었습니다. KT가 위대하다는 것은 KT를 나와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실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IT를 이끌어가기 위한 인력조건이 좋은 회사라 생각합니다.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신뢰감이 중요하데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슬기롭게 결단을 내려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IT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KT, 영업을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통신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달라”

<약력> -제 16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KT U-city 국장 -한국통신학회 협동이사 -KT 강남지역본부 경기남부NSC지사장 -<주>텔레콤어 회장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자께서는 향후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인데 국정에 대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서비스정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런 입법안을 만들어 국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가 통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IT전문가로서 이런 현실을 국회에서 충실히 대변 할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통신 방송 융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야 바람직한지?

KT에 있을 당시 KT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것은 지금의 IPTV 형태가 아닙니다. 현재 단말기 자체가 융합이 되었기때문에 모니터인지 단말기인지 그 구분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TV라는 말을 붙인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됐고 각 업계의 역할 조정을 못해서 관련 산업이 거의 죽었습니다. IPTV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업계가 모두 사장된 것입니다. 기존의 파이를 나누어 먹거나 산업간의 영역조정이 아닌 제2의 IT산업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첨단 IT산업 정립을 위해서는 법체계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통신시장에 있어서 또 서비스시장 및 단말시장을 포함하여 어떻게 가야 올바른 방향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신 요금에 관하여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금을 인하하려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과점체제이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요금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강력한 드라이브

를 통해 통신사업자 스스로가 아닌 타율적 방법으로 요금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체제에 근간한 새 정부의 운영방침에 어긋납니다. 통신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물가 영향에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추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신요금을 낮추는 것이 상정적인 효과일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영역을 통해서 통신요금 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사업의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문제를 거론할 수 밖에 없는데요. IPTV가 대표적인 예가 되지만, 규제 때문에 사실은 신사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사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규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지?

규제정책의 제한보다 지원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KT나 SKT, LGT같은 국내 선도기업은 정부의 규제에 맞추기 이전에 정부에 이라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며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한 연구비용이나 세제혜택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일정부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통신산업을 이끌어다가다 보니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사실은 선도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의사결정이나 의사소통에 있어 상당히 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다 못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집어 말해보자면, 정부는 규제기관이지 지원기관은 아닙니다. 정부의 조직이 축소되고 조정될수록 그에 대한 민간의 영역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통부와 방송위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어 그 역할을 하겠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기능들이 많이 정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규제개혁이 안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라도 합치고 쪼개더라도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정부기능의 영역이 줄어들수록 민간기능 영역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KT민영화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니다.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짚어보신다면?

민영화의 근본정신은 창의성과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KT는 IMF이후 구조조정만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경영진들은 구조조정만을 먼저 시작해왔습니다. 민영화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민영화에 대한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습니다. 민영화라고 하는 그것이 일자리를 줄이고 구조조정이 목표였다면 필요 없는 민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가 외국인 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안보에도 훼손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자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 폐해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많으면 결국은 영업평가가 사정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사업의 기본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KT의 지분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KT는 공공재적 성격도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강조하는 만큼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공공성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외국인 자본에 의한 자율성을 잘 조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KT출신이 정계에 진출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KT조합원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라면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근간은 KT이고 넓게는 정보통신부 비즈니스 영역의 출신이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KT직원들이 나의 당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KT가 그 간에 통신산업을 리드해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영업을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개발·실현영역을 가졌으면 합니다.

KT 우리사주조합 정기 대의원대회 열려

우리사주조합 운영현황 보고 및 우리사주조합 임원(이사, 감사) 선출 의결

2008년 KT우리사주조합 정기 대의원대회가 4월 30일(수) 연구개발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조합장(권상표)을 비롯한 대의원 276명 중 253명이 참석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현황 보고 △우리사주조합 임원(이사,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리사주조합 설립 목적과 연혁 및 주요업무를 소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조직과 우리사주 보유현황 및 지분, 매입 용자금현황, 배당현황, 2007년도 우리사주조합 결산보고서를 보고했다. 이후,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서는 후보자 이사 7명(조합장은 당연직), 감사 2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로 재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248표)으로 후보자 전원이 당선됐다.

《우리사주조합 운영현황 보고》

1. 우리사주 보유현황 및 지분
 - 보유현황

(2007년 12월말 기준)

구분	1 ~ 3차배정 (93 ~ 96)	4차배정 (02. 5. 28)	5차배정 (03. 9. 26)	6차배정 (05. 5. 16)	7차배정 (05. 8. 26)	합 계
취득	16,572,029	17,714,885	1,803,296	76,732	2,297,580	38,464,522
인출	16,567,620	5,583,684	904,977	2,260	63,000	23,121,541
보유	4,409	12,131,201	898,319	74,472	2,234,580	15,342,981

○ 지분현황

(2007년 12월말 기준)

KT 총 발행 주식수	사주조합 보유주식	지분율(%)	기준일
279,627,400주	15,342,981주	5.49(%)	2007.12.31

2. 우리사주 배당 현황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배당률	10%	14.4%	17.2%	60%	60%	40%	40%
배당액	500원	720원	860원	3,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KT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우리사주조합 임원(이사, 감사) 을 아래와 같이 선출했다.

1. 선출인원 : 총 9명 (이사 7명, 감사 2명)
2. 당선자

구분	노동조합측		회사측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이 사	한 호 섭	복지1국장	신 광 석	사업전략담당
	전 형 집	복지2국장	주 영 범	지배구조담당
	김 성 수	정책1국장	박 건 기	내부고객민족담당
	유 경 규	정책2국장		
감 사	박 경 윤	사무국장	오 흥 석	윤리경영1담당

2008년 1차 현장직원 본사 방문 체험



2008년도 제1차 현장직원 본사방문 1일 체험이 4월 28~29일 양일간 시행됐다.

4월 28일(월) 상경하여 특급 호텔에서 하루 숙박한 150쌍(309명)의 직원들은 자율체험 시간을 갖고, 29일 본사에 도착해 각 사업부서를 견학하고 드라마 촬영 장소, KBN스튜디오 등을 체험했다. 이어 오후에 광화문으로 이동하여 KT아트홀에서 문화 체험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13년 차 결혼기념일을 맞이한 사내부부 참가자가 눈길을 끌었다. 강남지방본부 박종열 조합원과 강북지방본부 배현영 조

합원이다. 무뚝뚝해 보이는 남편은 마지막 웃음을 건네며 “결혼과 함께 집안일 돌보며 직장 생활하느라 지난 10여 년 세월 동안 수고 많이 했다” 라며 아내에게 말을 건네고, 이번 방문으로 소중한 추억과 함께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되었다며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온 한 조합원은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방문해 보니 KT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특히 가족에게 자랑스럽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가족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 전체가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고, 진행요원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꼈으며 남편 회사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참가자 대다수의 조합원과 가족들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분기별로 시행되는 현장직원 본사방문 프로그램은 150쌍이 초대되어 유명 특급호텔에서 하루 숙박하고 이후 본사 방문과 문화행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부여된다. 노동조합은 평소 본사 방문이 쉽지 않은 현업직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통해 평소 본사 방문이 쉽지 않은 현장 조합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본부 자원봉사활동

전남지방본부 임종대 위원장과 사무국장 및 지사지부장은 4월 14일~16일(2박3일)간 여수 거문도 덕촌분교를 방문하여 분관건물과 별관, 외벽 페인팅 및 인터넷PC 책상을 조립하여 증정하고 분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다.



전북지방본부, 조합간부 IT능력향상 교육

PC클리닉, OA활용법, UCC제작 등 IT능력향상과 업무능력 배양



전북지방본부(위원장 양정우)는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조합간부를 대상으로 IT능력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방본부 주관(회사 협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 앞서 양정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간부는 조합원의 대표로서 조합의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 또한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조합간부로 거듭 태어나자고 강조했다.

본 교육은 위원장을 비롯 상무집행위원, 지부(분회)장 26명이 전원 참여 하였으며, 현장 실무에 필요한 PC클리닉, OA활용법, UCC제작 등 실습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금번 교육은 처음으로 시행한 교육으로 교육기간 내내 진지하고 유익하게 마쳤다.

제5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체육대회

2008년 제5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일상조합활동 업무의 틀에서 벗어나 대자연 안에서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통해 연대와 결속력강화 및 미래의 발전적 조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결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1) 기간 : 2008. 5.29(목) ~ 5.30(금)
- 2) 장소 : 미정
- 2) 대상
 - 전국조합간부 (지부장, 분회장, 지방상집)
 - 행사진행요원 및 축구 심판진
- 3) 참가인원 : 570명
- 4) 경기종목 : 축구, 릴레이 500M계주, 줄다리기